

크로아티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7.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3

크로아티아

I. 일반개황

면적	57천 Km ²	GDP	429달러(2006년)
인구	4.56백만 명(2006년)	1인당 GDP	9,410달러(2006년)
정치체제	의회민주제	통화단위	Croatian Kuna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및 EU 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5.84(2006년)

- 크로아티아는 1991년 구 유고연방에서 독립하였으며 제조업 및 관광산업이 발달한 국가임. 독립 이후 1990년대에는 동국내 세르비아계와의 무력 충돌, 보스니아 내전개입,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후유증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2000년 이후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2000년 신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2002년 EU 가입예정국으로 결정, 2005년 이후 EU 가입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개혁 미진으로 가입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슬로베니아에 이은 발칸지역의 체제전환 선도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발칸지역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도 양호한 편임.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제성장률	5.3	4.3	4.3	4.8	5.7
재정수지 / GDP	-6.2	-4.9	-4.1	-3.0	-2.7
소비자물가상승률	1.8	2.0	3.3	3.2	2.3

자료 : IFS, EIU

□ 2000년 이후 3-5%의 경제성장세 유지

- 1990년대 중반까지 유고내전영향으로 크로아티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 이후 코소보 전쟁 종결로 인한 관광산업 호조 및 저금리 기조하에 국내 투자 증대로 3-5%의 성장세를 유지해 옴.
- 2006년 경제성장률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부 지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수출 호조로 4.8%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 경제성장률은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증대,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지속적 증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출증가로 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적

- 유고내전시 하이퍼인플레이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강 Kuna화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5%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0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임금상승 등으로 3.2%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긴축통화 정책 수

행으로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적자폭 지속적 개선

- IMF의 권고에 따른 착실한 재정개혁 정책 수행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2006년 GDP 대 재정수지 적자는 조세징수체계 합리화 및 긴축재정 기조 유지로 3%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총선관련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호조로 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수입 증대로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 크로아티아의 독립 이후 구 유고 지역 시장 상실로 제조업은 1989년-1992년간 -46%의 성장을 보였으며 산업시설 파괴 및 섬유, 신발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로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시작됨.
- 코소보 내전이 종료된 1999년 4분기 이후 조선업, 섬유산업, 제약산업 등의 제조업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관광, 무역 및 운송 등 서비스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와 함께 발칸지역 국가중 체제전환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 o GDP 대비 생산비중('06년 기준): 서비스업 50.4%, 광공업 31.6%, 무역 및 운송업 10.5%, 농림수산업 7.5%

□ 관광산업 성장 지속

- 크로아티아는 유고내전 이후 평화정착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국가 중 하나임. 아드리아 해안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2006년 866만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은 78억 달러(GDP의 약 18%, 전년대비 9% 증가)로 관광산업은 주요 외화 수입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관광산업 발달을 위해 정부는 해안지역에 현대식 유흥시설 설치 및 개선, 해안지역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2010년 까지 약 1,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자본통제 완화

- 경제성장 및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05-09년간 3단계의 자본통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1단계로 비거주자의 증권 매입 및 거주자의 해외증권 매입이 허용되었으며, 2단계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중앙은행에 대한 자본거래 신고의무 폐지, 3단계는 2009년 1월 1일까지 기타 자본거래 관련 규제 폐지로 자본거래 자유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민영화에 의한 FDI 유입 지속

- 2003년 국영 석유가스공사 INA의 지분 25% 매각으로 순 FDI 유입액은 19.2억 달러를 기록함.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민영화 지연으로 순 FDI 유입액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2006년에는 INA 민영화 재개(지분 17% 매각) 및 투자 이익의 재투자로 순 FDI 유입액은 33.4억 달러를 기록함.
- 2007년에도 국영통신회사 T-Hrvatski Telecom의 민영화, 기업환경 개선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해 순 FDI 유입액은 46.5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EU 가입관련 개혁 미진

- 정부는 2009년 EU 가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정치, 경제, 사법제도를 EU 기준에 부합토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2007년 11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진행과 관련한 연례보고서에 서 EU 집행위원회는 부패척결 등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구조개혁 미진, 사법제도 및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소수자 인권보호 등의 분야는 여전히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힘.

□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 만성적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2004년 이후 정부는 사회보장지출 삭감 등을 통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임.
- 2007년 1-9월 재정수입은 T-Hrvatski Telecom의 민영화 관련 수입 및 경기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935억 Kuna(178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13.9% 증가)를 기록함. 재정수입 증가에 힘입어 정부는 200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를 2.8%에서 2.6%로 조정함.
 - 2003년, 2005년에는 주변국에 비해 높은 조세부담(사회보장세가 총 급여의 약 37%)에 따른 세율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하(22% → 20%)를 추진하였으나 IMF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동 세율변경안을 철회하는 등 IMF와 큰 마찰없이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중앙은행 환율정책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세

-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Kuna화의 대 유로 환율안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는 3%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관광수입이 집중되는 여름에는 외환시장에서 외화 매입,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압력이 높아지는 겨울에는 외환시장에서 외화 매각을 통해 계절적 환율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연중 유로화 대비 Kuna화 환율은 7.3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중앙은행 대출통제 정책으로 2007년 상반기 대출증가율 둔화

- 소비수요 증가에 따른 급격한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최근 4년간 대출통제 정책을 시행함. 2004년 중반 중앙은행은 민간은행의 신규 대외차입에 적용되는 기준율을 24%로 조정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조정으로 현재 기준율은 55%의 높은 수준이며 2006년 3월 이후 국내채권 발행 관련 수익의 55%를 중앙은행 무이자 계정에 예치토록 규제한 바 있음.
- 2007년 부터 민간은행의 연간 대출증가율을 12%로 규제(12% 초과 부분에 대해 중앙은행 발행어음 구매 강제)하여 상반기 은행의 대출증가율은 감소함.
- 그러나 IMF는 동 조치로 기업의 외화 차입 증가에 따른 환율변동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므로 대출규제와 같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은행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한 바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 상 수 지	-2,142	-1,903	-2,575	-3,255	-3,838
경 상 수 지 / G D P	-7.2	-5.3	-6.6	-7.5	-7.7
상 품 수 지	-7,908	-8,350	-9,346	-10,511	-13,677
수 출	6,308	8,210	8,955	10,606	12,110
수 입	14,216	16,560	18,301	21,117	25,787
외 환 보 유 액	8,190	8,758	8,800	11,487	13,128
총 외 채 잔 액	25,736	32,915	30,169	37,887	43,796
총 외 채 잔 액 / G D P	86.9	92.3	77.6	88.3	85.9
D . S . R .	26.2	26.4	23.5	25.4	22.0

자료 : IFS, EIU

□ 주요 교역품목 및 상대국(2006년 기준)

- 주요 수출품목: 기계 및 운송장비 28.9%, 광물 및 연료 15.1%, 음식료품 11.1%, 화학제품 9.2%
- 주요 수입품목: 기계 및 운송장비 32.2%, 광물 및 연료 15.8%, 화학제품 10.8%, 음식료품 7.9%

- 주요 수출대상국: 이탈리아(23.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6%), 독일(10.4%), 슬로베니아 8.2%, EU 25(63.4%)
- 주요 수입대상국: 이탈리아(16.7%), 독일(14.5%), 러시아(10.1%), 슬로베니아 6.3%, EU 25(65%)

□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추세

- 2000년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재 수입증가,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2006년에는 EU 가입 협상 진전으로 인한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와 동반된 상품수입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7.5%를 기록함.
- 2007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관광산업 호조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GDP의 약 25% 전망)로 7.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이후 GDP 대비 총외채잔액 증가추세

- 2004년 중반 이후, 외채관리를 위해 정부는 만기도래 정부 대외채무를 국내 신규차입으로 리파이낸싱 하여 2005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크게 개선됨. 그러나, 2006년에는 소비증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및 민간은행의 대외차입 증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88.3%로 상승함.
- 2007년에는기업부문의 외채(총외채의 약 40% 전망)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이 은행의 대외차입을 규제하면서 민간은행부문의 외채(총외채의 약 30% 전망) 증가세 둔화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85.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6년 168.9%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는 수출증가로 161.3%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2000년 이후 민주적 제도 개혁 실시

- 9년간 집권한 Tudjman 독재정권이 붕괴된 후 2000년 1월 총선 결과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SDP)과 중도우파인 크로아티아 사회자유당(HSL)을 중심으로 6개 정당 연합정권의 민주정부가 수립됨. 신정부는 유고내전 이후 국제적 고립상태를 탈피하기 위해 Dayton 평화협정 준수 등 친서방 정책 추진 및 대통령 권한 축소, 의회 권한 강화, 국영 방송국 개혁 등 제도개혁을 추진함.
- 그러나 SDP와 HSL간 이념대립으로 2001년 연정은 붕괴되었고 이후 SDP를 주축으로 4개 정당 연합정권이 구성됨. 그러나 연정내 보혁세력간 정책노선을 둘러싼 갈등 지속, 경제개혁 지연과 EU 가입협상 담보상태로 인해 2003년 11월, 중도성향의 Mesic 대통령은 조기총선을 요구함.

□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중심 연정 집권

- 조기총선결과 생활수준 향상과 EU 가입협상 진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중도 우파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DZ)이 66석을 획득(총의석 153석), 선거에 승리하여 군소정당과 연합정권을 구성함. 그러나 이후에도 연정내 갈등 및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로 IMF가 요구한 재정지출 삭감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정책수행에 어려움을 겪음.
- 이후 EU 가입협상 미진(2005년 10월에야 EU 가입협상 시작) 등을 이유로 2005년 1월 대선에서 HDZ 대선후보가 현 Mesic 대통령에 패하는 등 집권 HDZ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율이 점차 하락함.

□ 2007년 총선이후에도 정치적 안정 예상

- 2007년 11월 총선결과 HDZ은 66석을 획득(제1야당인 SDP는 56석 획득)

하여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함. 그러나 과반수 의석인 77석획득에는 실패하여 양당은 군소정당인 농민당(HSS) 및 사회자유당(HSL)와 연정을 구성하여 원만한 정책수행을 위해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임.

- HDZ는 자본이득 비과세(현행세제)를 주장하는 반면 SDP는 자본이득의 합산 과세를 지지한다는 점이 양당간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나 양당 모두 EU 및 NATO 가입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경제개혁을 기본정책으로 삼고있으며 주요 정책간 큰 차이는 없어 연정 구성후에도 큰 정치적 불안 없이 경제개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EU 가입협상 진행중

- 2000년 9월 EU와 안정제휴협약(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무역장벽 완화가 추진되었으며, 2003년 3월에는 EU 회원가입을 신청, 2004년 6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인정 받아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정부는 2009년 EU 가입을 목표로 현재 사법개혁 등 12개 조항(총 협상 대상 조항은 35개)을 두고 EU와 협상이 진행중이나, 정부 개혁 미진으로 협상은 지연되고 있으며, 2007년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의 EU 가입이후 회원국의 EU 확대에 대한 경계 및 가입조건 강화로 2009년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불확실한 상황임.

□ 주변 발칸국과 우호관계 유지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는 동국 내 크로아티아계 권익문제, 슬로베니아와는 아드리아해 조업권 및 국경문제 등이 잠재하고 있으나 분쟁상태로 비화되지는 않은 상황임.

□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주도

- 크로아티아가 가입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은 8개국으로 확대 발효될 예정이며 크로아티아는 의장국으로 EU에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

가리아 대신에 동 협정을 주도하고 있음.

□ 2008년 NATO 가입 예상

- 과거 전쟁으로 인한 경제퇴보를 경험한 크로아티아는 지역정세안정을 위해 NATO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2000년 5월 NATO 가입 사전 절차인 평화 파트너쉽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성공적인 군제개혁을 이루었으며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 증원 등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2009년경 NATO 가입이 예상된다.

2. 사회 및 소요사태

□ 사회불안 요인은 미미

- 인구의 약 90%가 크로아티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민족 동거에 의한 민족간 분규는 없으며, 종교적 갈등이나 기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국내적 갈등요인도 미미함.
- 의회 내 좌파와 우파 정당간의 갈등, 정치계의 부정부패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편이나, 2000년 이후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사회불안 요인은 적은 편임.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5등급(1997. 9) → 4등급(2000.10) 유지
- S&P: BBB-(1997.1) → BBB(2004.12) 유지
- Moody's: Ba1(1997.1) → Baa3(2001.11) 유지
- Fitch: BBB-(1997.1) → BB+(1999.4) → BBB-(2001.6) 유지
- I.C.R.G: 63/140(2006.10) → 53/140(2007.4) → 66/140(2007.10)
- Euromoney: 54/185(2006.9) → 54/185(2007.3) → 56/185(2007.9)
- I.I: 57/173(2006.9) → 59/174(2007.3) → 61/174(2007.9)

-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여 받고 있으며, Moody's는 2007년 7월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Positive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제신인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Moody's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2007.7, Stable → Positive) 사유
 - o 2007년 11월 총선결과에 상관 없이 EU 가입을 위한 경제개혁 지속 예상
 - o 리파이낸싱을 통한 대외채무의 국내채무 전환으로 환율변동 위험 경감
 - o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FDI 유입 및 수출 증대 예상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미국 Ex-Im: 모든 위험에 대한 인수가능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전액 단기 인수가능

3. 외채상환실적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유고연방의 대외채무 승계 문제와 관련, 1995년 3월 파리클럽을 통해 11억 달러(유고연방 공적 대외채무의 28.5%)규모의 공적 대외채무 승계 및 14년간 리스케줄링에 합의하였고, 1996년 7월에는 런던클럽을 통해 15억 달러(유고연방 민간 대외채무의 29.5%) 규모의 민간 대외채무를 승계함.
- 1995년 유고내전 종식과 함께 동 채무는 채권으로 재발행되었으며 1997년 2월 정부는 3억 달러(5년 만기) 규모의 유로본드를 최초로 발행하는데 성공함.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 활성화 등으로 보유외환이 늘어나 외채상환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음.
- 국내 은행 및 기업의 국제 신디케이트 대출 활성화로 인해 총외채잔액은 438억 달러(GDP의 약86%)로 과중한 편이나 외환보유액은 2007년 10월 말 현재 129억 달러 규모로 상품수입의 5개월분에 달함.

- OECD 회원국 ECA의 대 크로아티아 지원현황(OECD, 2007년 9월말 기준)
 - o 단기: 총지원잔액 2.5억 달러(연체금액: 8,630만 달러, 연체비중: 34.5%)
 - o 중장기: 총지원잔액 12.6억 달러(연체금액: 1.3억 달러, 연체비중: 10.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4.15 수교(북한과는 1992.5.12)
- 주요협정체결: 무역협정(1995), 이중과세방지협정(2002), 투자보장협정(2005)
- 교역현황

- 양국간 교역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 크로아티아 출초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의 대 한국 수출가능품목이 제한되어 있어 단기기간에 무역불균형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o 대 크로아티아 수출: 2005년 8,262만 달러(+11%) → 2006년 7,991만 달러(+3.2%)
- o 대 크로아티아 수입: 2005년 445만 달러(-25.4%) → 2006년 172만 달러(+285.4%)
- o 2007년 1-10월 간 대 크로아티아 수출은 1.6억 달러(+161.2%), 수입은 2,019만 달러(+52.7%)를 기록함.

- 주요수출품목: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가전제품
- 주요수입품목: 전기기기, 수산물, 섬유사

- 해외직접투자 현황(2007년 9월 말 기준): 없음.

V. 종합 의견

- 경상수지 적자 확대, 경제규모에 비해 과중한 외채부담 등이 우려되나 5%대의 경제성장 달성에 따른 GDP규모 증대, 재정수지 개선, FDI 유입을 통한 투자활성화 등이 경제활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 2007년 11월 총선 이후에도 경제개혁 기조 유지를 통하여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환율변동 위험경감조치 등을 바탕으로 국제신인도는 안정적인 수준임.
- 특히 EU 가입을 위해 경제구조개혁을 정책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활성화, 인프라 건설을 위한 FDI 유입 증대로 경기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해외경제연구소 유럽·기획 팀장 조양현
(☎3779-6663) yhjo@koreaexim.go.kr